

# 與, 추경·공수처·일하는 국회법 '속도전'

### 3차 추경 예비심사 마무리...회기내 처리후 7월 임시국회 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 배분방식 개정 놓고 당내 찬반 분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원 구성을 마무리한 데 이어 3차 추경안 처리 등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경 예비심사를 마무리한 민주당은 일단 오는 7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 처리부터 마친 후 7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후속 법안 및 일하는 국회법 등 개혁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3차 추경

이 아니더라도 국민을 위해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책임 여당으로서 일하는 새 국회로 민생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관련해 이해찬 대표가 전날 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 배분 방식을 바꾸는 개정을 언급했지만, 원내지도부는 일단 법 시행도 전에 개정은 명분이 떨어진다며 선을 그어 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개정한다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 개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수처법과 관련한 원칙론적 입장은 여야가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점차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단독 드리블하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 2명이 반대하면 추천이 불가능한 구조인만큼 통합당의 협조 없이 내달 15일 공수처의 정상적 출범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7월 15일 출범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기한 안에서 통합당을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법 개정을 해서라

도 공수처법을 관철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로지 야당만의 추천에 의한 공수처장 주장에다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야당이 공수처 설치에 협조할 리 만무하다"며 "법 개정도 포함해 제때 출범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의 1호 당론 법안 추진 절차도 시작한다.

박 원내대변인은 "내일 오전 민주당 의원 대상으로 일하는 국회법 전체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통합당 "추경 일주일 연기하면 심사 참여" 의원들 상임위 강제 배치, 현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키로

미래통합당은 지난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3차 추경 처리를 약 일주일 연기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당 최형우 원내대변인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35의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심사를 사흘 만에 마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7월 3일까지 추경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통합당은 그러나 곧바로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되는 만큼, 11일까지로 늦추자는 것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예산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나. 대통령이 35조원 하라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게 국회의원"이라며 "추경 중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

도 있고, 수십만명 단기 알바(아라바이트)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3차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5~6개월 버티기에 불과한 단기 노무 일자리가 다수"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DB 알바(데이터 구축 요원)', 모니터링-조사 요원, 안전-방역 인력, 공공서비스-단순 근로 등 82개 사업에 9조4000억원을 편성했다면서 "일자리 통계 왜곡, 세금중독 일자리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을 강제로 각 상임위에 배치한 데 대해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홍콩보안법 통과 정부, 우려 표명

### 미·중 갈등 격화 촉각

정부는 지난 30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해 '홍콩이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법이 홍콩 시민의 자유에 미칠 영향에 사실상의 우려를 나타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홍콩은 우리에게 밀접한 인적·경제적 교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정부는 홍콩 국가안전법 채택 관련 동향과 향후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1984년 중·영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하며, 중·영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서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전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국과 영국이 1984년 체결한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에도 50년 동안 홍콩의 자치 보장 등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일국양제'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영국과 미국 등은 중국의 홍콩보안법이 일국양제 원칙을 약화하는 동시에 공동선언에 명시된 국제적 의무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중국은 공동선언은 중국의 일방적인 정책 선언으로 영국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가 공식 입장에서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처음 언급한 것은 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 추경 3조1030억 증액 ... 3일 본회의서 처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통합당 불참 속 의결

30일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경 예비심사도 마무리됐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3조1031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심사가 1~2시간 안에 마무리됐다. 일부 야당 의원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기도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은 예정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추경안

보다 2조3100억92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2조2800억원이 증액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위원회는 올해 본예산에 들어 있다 가 각역대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 767억원을 되살리고, 별도 유형 사업으로 1951억원을 신규 증액해 모두 3880억80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이를 실행하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위촉된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화발전기금 55억원 등 798억9800만원을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

산업자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예산 등 3163억1000만원을 증액했고, 환경노동위원회도 고용센터 인력지원 예산 등 374억원을 증액해 각각 의결했다. 국방위원회는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에서 2억2000만원, 첨단과학훈련 및 교육 예산에서 7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정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정부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

# 등록금 10% 환불 대학에 쓴 돈 비례해 지원

### 민주, 재정 보전 방안 확정...학생 1인당 30만원대 될 듯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에 따른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 각 대학이 등록금의 약 10%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면 그에 비례해 재정적 보전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지난 30일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대학이 등록금 반환 결정을 내리면 대학의 학력 향상 등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긴급지원금 명목 등으로 이에 비례해 자금을 집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교육부의 실태조사 및 학생들의 수요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각 대학이 학생들에게 돌려줄 등록금의 비

율을 10% 안팎으로 추산했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러, 대학의 지구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논의가 진행됐다"며 "대학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 등을 따져 지구 노력을 등록금의 10%로 잡았다"고 말했다. 각 대학이 등록금의 10%를 돌려주게 되면 학생 1인당 돌아갈 금액은 30만원대로 예상된다. 전국 대학생 수를 계산하면 총 반환액은 약 5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장학금 등으로 반환 방식을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이형석,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 국회의원이 30일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형석 의원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역사왜곡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제출되어 당론 채택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5·18역사왜곡처벌법" 개정회를 통해 '헌정질서 파괴 범죄' 에도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

출되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제정된 이후 세계 각국은 반인륜범죄와 반인도적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 중에 있고, 우리나라 역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라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